



기획재정부, 2012년 업무계획 보고

오병국 연구원

■ 기획재정부는 1월 3일 ‘위기를 이겨내는 경제,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’을 주제로 한 ‘2012년 업무계획’을 발표함.

- 기재부는 유럽 재정위기, 원자재 가격 불안, 20년 만의 양대 선거 등을 2012년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,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 전개별 3단계¹⁾ 대응계획에 따라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임.
 -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시장 심리 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함.
 -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둔화되는 2단계에는 유동성 공급확대와 재정집행 규모의 탄력적 조정 등 경기보완적 거시정책을 수행함.
 - 급격한 자본유출이 진행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외환확보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,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돌입함.
- 또한, 기재부는 ‘생활물가 안정’과 ‘일자리 기반 확충’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함.
 -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 안정,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, 가격정보공개 및 경쟁촉진, 유통구조 선진화 등 가격안정 정책과 구조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.
 -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, 고졸자, 문화관광·글로벌,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일자리를 재정에서 중점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함.
- 이밖에도 기재부는 서민·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.
 - 서민·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장기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신설하여,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계층이 10년 이상 적립하면 납입액의 40% 수준(연간 최고한도 240만 원)에서 소득 공제혜택을 주기로 함.

1) 1단계: ‘시장변동성확대’, 2단계: ‘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’, 3단계: ‘급격한 자본유출과 실물경기 침체’

- 부부합산 연소득 2천 5백만~4천 5백만 원의 무주택 서민층이 85 m^2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한도 내에서 10년 4.6%, 20년 4.8%, 30년 4.85%의 금리로 대출상품을 공급할 예정임.

■ 한편, 통계청은 기재부와 함께 '2012년 업무계획'을 발표하면서, 가계부채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망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.

- 통계청은 2012년 가계의 소득, 소비, 자산, 부채,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종합패널을 구축하며, 이를 위해 1만 가구규모의 표본 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, 재무건전성을 추적 조사할 계획임.

(기획재정부, 통계청, 1/4)